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불멸의 철학자 칸트 그의 철학을 돌아보다

시간: 2024년 4월 22일

장소: 열림홀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 (14:10 ~ 14:30)

-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14:30 ~ 15:30)

-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이충진 한성대학교 교수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일시

2024.4.22(월) 14:00 ~ 15:30

☑ 임마누엘 칸트(1724 - 1804)

장소

열림홀(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발표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영용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이충진 한성대학교 교수

주최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이마누엘 칸트: 자유의 철학 정의,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국가¹⁾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칸트는 누구인가?
-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I. 왜 칸트인가?

-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에인 랜드의 해석:
 - ▶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이타주의자로 칸트를 해석.
 - ▶ 파시즘의 선구자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이라고까지 비판
 - 이런 해석을 통해서 에인 랜드는 칸트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열에서 분리. 그 결과, 자유주의자들이 칸트의 사상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했음.

-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칸트의 정치철학을 이용한 좌파
 - ▶ 강력한 국가의 재분배 역할/ 서민층의 기회를 개선할 국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정말로 그런가? 우리의 답변
 - ▶ 자유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확립한 인물

1) 이 글은 민경국 저 『국가란 무엇인가』(북앤피플 2018) pp. 143-161의 내용을 요약한 것.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지지

▶ 칸트는 고전적 자유주의자

-정의,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국가

II. 칸트는 누구인가?

□ 출생과 삶의 여정

▶ 칸트는 프러시아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말안장 수리공. 9남매 중 넷째.

▶ 대학에서 철학, 수학, 신학, 물리학 등을 공부, 뉴턴의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 1755년 박사 학위를 받았음

▶ 15년 동안 시간강사 생활

-수강생들이 지불할 의향에 따라 강사료를 받는 강사. 강사들은 부업을 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려움.

- 칸트는 educational entrepreneur였음. 가르치는 기술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새로운 주제를 개발. 수강생들로 가득 찼다. 이들 중에는 대학에 등록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았음.

□ 인식론 대신에 윤리학에 더 큰 관심

▶ 칸트는 1770년, 칸트는 교수직을 얻어 그를 유명하게 만든 작업을 시작, 이게 1781년 『순수이성비판』. 인식론과 관련된 저서,

▶ 우리가 어떻게 외부의 현실에 관하여 알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즉 인식론의 문제는 칸트에게 제일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사변적인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의 중심된 관심은 윤리였음

▶ 칸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위해서만 인식론에 주목. 우리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도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어야 함.

□ 복잡한 현상(미제스)의 문제.

▶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관찰을 통해서 도덕을 배우는 것(실천적 인류학)도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어려운 일. 인과관계는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음. 이게 바로 "복잡한 현상의 문제:

- ▶ 어느 것이 결정적인지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
- ▶ 귀납적인 방법.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은 윤리적 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
- ▶ 칸트에게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접근 방식-
 - 도덕에 대한 연구는 논리적 분석
 - 비 모순률 법칙, 법칙이 가르치는 교훈은 정언명령.
- ▶ 정언명령을 명령을 통해 칸트가 제한된 정부와 최대한의 자유를 신봉하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III. 정언명령과 정의로운 행동규칙

□ 정언명령: 도덕적 논쟁에 대한 해결 방법

▶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하자.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약속은 늘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다. 그런 대답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답일까? ○

▶ 칸트는 그의 첫 번째 도덕 철학 저작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논기』에서 도덕적 논쟁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일반적인 도덕적 직관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다.

▶ 칸트는 이성(논리)의 관점에서 행동규칙을 찾는다. 필수적인 도구는 '비모순율(law of non-contradiction)'이다

□ 정언명령 1: 평등한 자유

“보편적 법이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공준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 '보편적 법'이라는 보편성의 의미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자. 즉, 내가 지금 취할 특정한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고 해도 그런 행동이 어떤 부정적인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다. 비모순율

▶예1) 돈을 갚겠다고 거짓 약속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나? 거짓 약속이 보편적 규칙이 된다면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순). 거짓 약속은 보편적 도덕이 될 수 없다.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

▶예 2)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도둑질해도 도덕적으로 옳으나? 그런 행동 준칙은 보편화할 수 없다. 훔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 행동원칙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내가 소유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도덕적 의무를 산출하는 칸트의 절차는 특정한 행동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가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절차다.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유: 평등이라는 가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엄함. 칸트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 예외가 되려는 사람.

▶도덕의 절대성. 대다수가 수락한다고 해도 정언명령을 위반하는 가치 또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파괴적.

▶예 3)한국 사람 대다수가 소득의 강제적 재분배를 찬성한다고 해도 그 관행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음. 왜: 분배는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하는 원칙.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틀렸음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를 지지하는 준칙은 '비모순의 법칙'에 대한 위반.

▶예 4) 공로원칙에 대한 반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경우 이것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 비모순율 위반.

□ 정언명령 II: 존엄성

▶물건은 존엄성이 없다. 물건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수단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인간의 존엄성 때문.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 그런 존재는 목적 자체로도 취급해야 함.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도 대하라”라는 두 번째 정언명령 공식: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는 준칙을 보편화한다면 누구나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합리적 정신은 다른 합리적 정신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집착. 그러면 사회는 해체된다. (모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내가 수단으로 취급한 사람에게 공손함 또는 존경심을 그 대가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장의 자발적 교환에서처럼 합의를 통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예 1) ‘나는 점심에 옆집 식당을 이용한다. 그 이용에서 식당주인이나 그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존중한다. 예의바르게 공손히 그들을 대우한다. 그리고 메뉴에 기록된 조건으로 돈과 교환한다. 나는 나의 식당주인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속이지도 강제하지도 않는다.’

▶예 2) 인간을 오로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예는 강제 거짓 강요 폭력. 그러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버는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 그래서 시장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사회다.

▶ 예3) 재분배의 부도덕성.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 복지국가가 부도덕한 이유도 동일한 가치를 납세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수혜자가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

-특수 계층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정책,

-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부도덕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을 수단으로만 취급하기 때문.

▶ 정언명령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는 우리는 타인을 오로지 그의 목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 인물이 여류자유주의자 애인 랜드다.

□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 정언명령은 시간 장소 사람에 불문하고 예외 없이 적용. 또는 이익이나 개인의 행동 목표·동기 또는 의도와도 독립적.

▶ 가언명령: 살인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살인해도 된다. '네 손이 불에 데기를 원하지 않으면 뜨거운 난로를 피해라', '형무소에 가기 싫으면 살인하지 말라.' '최선의 방책은 정직이다' 등.

□ 정언명령은 행동규칙이 정의롭기 위한 조건(하이예크)

▶ 행동규칙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끼리의 외적 행동관계에 적용.

-한 사람의 희망이나 욕망과 같은 내적인 것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행동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적용에서 차별이 없다. ▶ 시간과 장소 인적 특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이런 특성을 가진 규칙은 대부분 특정한 행동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동규칙.

▶ 도덕원리에 따른 행동규칙은 개인의 자유, 존엄성,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가치들을 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의미하는 법의 지배다.

▶ 정언명령은 정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로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소위 소극적인 테스트다.

▶ 주목할 점은 정언명령은 도덕규칙의 적극적인 내용을 도출할 연역 과정의 전제로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칸트의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특성).

□ 정언명령은 법다운 법이 될 조건: 법치국가적 법

▶ 일반적 도덕 원칙으로서 정언명령은 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도덕철학적 개념인 정언명령을 적용한 것이 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법의 지배"라는 법철학적 개념을 선형적 방법을 기초로 한 일반윤리학으로 재해석한 것이 정언명령.

▶ 법의 지배: 법다운 법이 될 수 있는 조건

-보편성: 법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입법은 모든 인간은 똑 같이 존엄성이 있다는 도덕적 가치의 위반이다.

-탈 목적성: 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언명령의 두 번째 공식의 위반이다. 시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특정한 행동을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무론적 윤리의 특성이다. 이 같은 법 원칙을 기존의 법 시스템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IV. 시장과 자생적 질서(자연의 감춰진 기획)

□ 경제학에 해박한 칸트: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은둔한 철학자가 아니었음.

▶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의 문헌을 두루 섭렵하여 기업과 시장에 박식했음. .

▶ 만년에 칸트는 거의 매일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대부분은 사업가. 상인. 은행가였다는 것이 역사가의 증언. 화제: 경제와 정치

▶ 친구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돈도 벌었고 유산으로 상당한 재산도 남겼다.

□ 시장은 목표의 왕국

▶ 좌파는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를 들어 자본주의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체제라고 비판. 노동자를 자본가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체제: 자본주의.

▶ 좌파의 비판은 정언명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시장참여자들은 사기나 강압이 없이 고객들의 목적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 시장은 수많은 목표의 추구가 가능한 체제. 시장은 다목적 시스템. 시장은 모든 사람이 타인들을 목표로 여기는 장소. 그래서 시장은 목표의 왕국.

“목적의 나라에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갖든지 아니면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에게 필요와 관련된 것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 칸트는 자유의 도덕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존엄성이 구현된 것이 바로 시장경제라고 이해했다. 이성적인 존재가 목적 자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제도적 조건이 시장이라는 것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잔디를 깎을 때—사람은 결코 단순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잔디 깎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 제안을 하고 그가 자신의 합리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잔디를 깎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를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자연의 감춰진 계획’에 따라 작동한다.

▶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을 9가지 명제로 설명하는데, 그 명제들 가운데 8번째 명제에서 인류 역사를 “자연의 숨겨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

“개인들은 (중략) 자신들의 성향 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모순되는 그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각 개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에 의해 의도된 진로를 따라 인도되어 그들이 설사 알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을 목적을 무의도적으로 달성한다.”

▶ 시장역사의 진로가 가져다주는 유익한 결과는 자연의 감춰진 목적으로 여긴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해당된다. 그 원리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의 예는

“따라서 산물이 최대의 가치가 되도록 개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노력함으로써

개인들은 사회의 연간 수익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실제로는 그들은 공익을 증진할 의도도 없고 어떻게 증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²⁾

▶ “자연의 보이지 않는 기획”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거래의 자생적 질서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이성을 통해서 인정된 법 시스템이 생겨난 것.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성향이 혼합한 된 것, 즉, “반사회적 사회성”이 인간의 본성 그런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안정된 이유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기획”을 통한 본성의 통제 때문이다.

▶소망스러운 결과를 오로지 인간의 자연적 이타심이나 이와 유사한 성품에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주체의 자율성을 위해 공적 영역을 최소화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자연의 감춰진 계획을 통해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을 통제하여 안정된 사회가 확립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임.

□시장질서와 자유경쟁

▶ 경쟁이 없이는 인간은 “나태함과 수동적 만족감”에 빠짐. 경쟁이 없이는 “모든 탁월한 자연적 소질의 개발”도 없음.. 따라서 인류의 번영은 주로 사회 속에서 인간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쟁의 무의도적 결과. 경쟁과 대립은 문화의 개발과 도덕적 완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 칸트의 믿음

▶경쟁은 역사철학적으로 볼 때 이성의 발전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관점이 가능한 이유는 경쟁 속에서 질서가 가능하기 때문. 경쟁의 자유가 유지되는 한 “자동화가 스스로 유지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스스로 유지됨 경쟁의 자유가 제한되면 시장의 안정성과 질서가 방해되고 혼란이 야기될 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면, 기업은 “생명력을 잃고” 그리고 행복추구의 자유를

2) Smith(1776/2015: 552)

제한하면 전체 사회의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 칸트의 믿음.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을 연상시키는 대목). 규제를 통한 자유의 제한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서민층을 비롯하여 보편적 번영을 지체시킨다는 것이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의 핵심 내용.

▶ "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한데 자유 없이는 부를 생산할 활동이 번창할 수 없다"고 주장. 자유무역은 전쟁을 극복하고 모든 나라의 이득을 증진. 자유무역은 세계평화를 창출(영구평화론)

□ 시장질서와 법질서의 상호의존성

▶ 법질서와 경제질서의 엄격한 구분; 그 두 가지 질서는 상호의존적. 시장을 지배자가 없는 계약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라고 보았음. 질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인식은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 법치국가는 시장질서를, 시장질서는 법치국가를 전제.

▶ 칸트에게 경제질서는 법이 침투할 대상이 아니었다(공리주의와 비교). 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법이 뒷받침을 할 뿐. 그런 뒷받침만 하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로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인과 그룹의 경제활동이 방해받아서 안 됨.

V. 법치국가와 국가의 과제

□ 권리의 상호인정을 확립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역할

▶ 법과 법치국가의 역할에 관한 칸트의 생각: 법과 법치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보호됨. 자연상태에서의 권리는 불완전하고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 법치국가에서 비로소 권리의 법적 성격이 확립. 그래서 국가의 존재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 **법치국가의 중심과제는 시민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 공권력의 행사가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 법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된 국가가 법치국가다.

▶ 의회에서 정했다고 해서 전부 법일 수는 없고 주권적 국민이 원한다고 다 법이 아니다. 법은 "보편화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시민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차별이 없이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의 법.

▶ 법치국가의 중심과제는 법치 국가적 법원칙을 통해서 자유·시민권을 보호하는 일. 칸트는 귀족의 특권과 노예제의 폐지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법원칙 때문. 특권과 차별은 법치국가이념과 합치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득수준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불리하게 하는 것은 법의 보편화와 충돌

□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국가는 독재를 부른다.**

▶ 칸트는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국가의 선행의무를 강력하게 부정. 국가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자선적일 수 없다는 것,

▶ 정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가장 큰 독재.

▶ 선행은 도덕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지 법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법 영역에 속하는 것은 시민들이 타인들의 인격, 소유를 침해하는 불의의 행동.

▶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들의 삶을 가장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 법 원칙만 있을 뿐 행복의 원칙은 없음.

이마누엘 칸트: 자유의 철학 정의,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치국가

김영용(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민경국 교수님의 자유주의 철학자로서의 칸트를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내적 일관성 및
외적 정합성이 타당하게 유지됨. 다음 사항은 일반적인 질문임

1. 칸트의 도덕 철학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더라도 지켜야 할 규칙을 보
여주는 것(민경국 발제문)
 - 사변이성 비판: 경험에 의하지 않은 이성의 월권을 비판 (신의 존재를 증명?)
 - 실천이성 비판: 경험에 의해 조건 지워진 이성이 전적으로 도덕의 근원이 된다는 월
권을 비판
2.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
 - *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
 - 도덕 규칙은 이성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의지를 실천하도록
개인에게 명령하는 자율적 규범
 - 도덕 규칙은 인간의 실천이성에 의해 자명하게 의식되는 것으로서 선(善)의지의 준거
점
 -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는 존재이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성의 자유 의지
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음
 - 도덕 규칙은 자연 인과성이 아니라 자유 인과성에 의해 형성. 즉 도덕은 자연이 아닌
인간 이성에서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인(因)으로 하는 과(果)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며 추상적. 법의 지배에
서 강조하는 법의 탈(脫) 목적성을 선언적으로 표현
3. 정언명령의 수립
 - 인간의 이기적 속성은 남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런 경향성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이익에
근거하지만, 남들도 보편적이며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되는 원리들인 행동
규칙이 형성돼야 함
 - 한 사회에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이 소수에서 다수,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로 확대되면 이러한 경향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거나 거의 없
어짐

: negative test process

- 각 개인은 나의 목적을 위한 준칙 중에서 남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금지의 규칙으로 삼고, 이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확대되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규칙이 수립됨
-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 규칙은 개인적 경향성과는 일절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타당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타당해야 하는 정언명령

4. 정언명령에 대한 질문

- 경험적으로 진화한 도덕 규칙을 이성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정언명령의 도출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 °개인의 내부적 질서에서 사회질서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가?
 - °한 사회에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이 소수에서 다수,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로 확대되면 이러한 경향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짐
 - °인간 간의 관계로부터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인가?
 - 도덕 규칙은 인간 이성의 지시·명령에 의한 수립이 아니며, 인간이 이기심에만 의존하면 자신은 물론 남의 이익을 해치고 서로의 생존 기회도 낮추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해 온 도덕 규칙을 지키도록 길들여짐.
 -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도덕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복종
 - 그러므로 자유(행동의 자유)와 도덕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인(因)이나 과(果)가 아니라 인간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형성
 - °자유 의의가 부정된다면?
 - °흄 및 하이에크 등에 의하면 의지의 자유는 없음

5. 기타

- 이성만 하나인데 용도가 다르다?
 - °흄: 이성은 진위 판별, 정념은 행동 추동

<토론문>

신중섭(강원대 명예교수)

평소에 서양 윤리학을 강의하면서 칸트를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연결시켜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철학에서 칸트는 주로 인식론, 윤리학, 형이상학, 미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성을 중시한 근대 계몽주의자로서 자유를 중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유주의자로 언급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깊은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역사철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칸트의 사상이 논의된다.³⁾

칸트는 윤리학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의무와 권리에 대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그러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⁴⁾에서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잘못하여 처하게 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자신의 지성을 다른 이의 지도 없이 사용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미성숙은 스스로 잘못하여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성숙의 원인이 지성의 부족이 아니라 결단의 부족에, 또 자신의 결심을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사용할 용기의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계몽의 표어다.”라고 하였다. 계몽이란 타인의 지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겁하고 게을러서 미성숙을 편안하게 즐긴다고 말한다. “나를 대신하여 생각해줄 책이 있다면, 나를 대신하여 양심을 지켜줄 성직자가 있다면, 나를 대신하여 음식을 조절해줄 의사가 있다면, 기타 등등, 나는 스스로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성을 공적(公的)으로 사용할 자유가 필요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훈련해라!’고 말하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제 세금을 납부하라!’,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제 믿기만 하라!’고 외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과감하게 미성숙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계몽이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자유주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칸트가 주장한 자유가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스미스의 자유와 같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왜냐하면 칸트의 자율은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

3) 이한구, “칸트와 역사 세계”, 임마누엘 칸트/이한구 편역, 『개정판 칸트의 역사 철학』, 서광사, 2009, 155-205쪽..

4)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 임마누엘 칸트 앞의 책, 13-22쪽.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고, 칸트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욕구에 복종하는 행위로 본다. 그러므로 칸트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선택은 자율적 행위가 아니라 타율적 행위다. 칸트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자기 이익이나 욕구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칸트는 시장자유주의는 아닐 것이다.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보를 했는데, 이 규칙을 어긴 적이 있다고 한다. 루소의 책에 몰입하여 산보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칸트가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루소는 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사상가다. 칸트와 루소, 자유주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민경국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토론자의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 민 교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연권론, 합리론, 진화론, 헌정론으로 구분하고 칸트를 합리론에 포함시켰다. 자연권론과 합리론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 진화론과 헌정론에 입각한 자유주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전통에 속한다. 민 교수의 이러한 구분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서로 다른 사상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윤리학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정언명법에 대한 법철학적 해석, 시장과 연계된 칸트의 역사철학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다⁵⁾. 그런데 칸트는 하이에크의 구분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⁶⁾에 속하는가, 아닌가?

이와 함께 칸트가 자유, 평등 그리고 시민 연방(civil commonwealth) 안에서 각각의 독립을 논의하였고, 법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보호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법 위에 놓고, 시민의 전면적인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 질서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칸트는 주류 자유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아즈의 주장⁷⁾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물음이 생기기도 한다.

5) 민경국, 『국가란 무엇인가』, 북앤피플, 2018, 150-171쪽.

6) F.A.Hayek, "Kinds of Rationalism", *The Market and Other Orders* (The Collected Works of F.A.Hayek, Volume XV), edited by Bruce Caldwe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pp.52-53.

7) 보아즈는 자신의 평가의 근거로 『도덕 형이상학』의 한 문단을 인용하였다. David Boaz, *The Libertarian Reader*, The Free Press, 1997, pp.142-148.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264-266, 345-348쪽, Immanuel Kant, *Kant: Political Writings*, edited by Hans Rei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137-138.

자유주의를 위한 칸트의 기여 - 과거와 미래

이충진(한성대 교수)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는 ‘자유’ 및 자유의 담지자로서의 ‘개인’입니다. 자유로운 존재자로서의 개인/인간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국가 시장 사회 등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관건은 ‘자유’의 이해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개념 정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선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개념 정의는 (1)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가능한/허용된 행위 영역 및 (2) 그것의 제한 조건(영역의 경계)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유는 한편으로는 ‘타인의 억제나 간섭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는 특정한 제한 조건 없이는 존재/성립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 200여 년 전 정식화된 이 자유 개념은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대적-현대적 자유 개념의 형성 및 발전에 칸트는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유 개념에 인간 존엄성 개념을 결합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점을 독일 위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법치국가/권리국가[인간사회]에서 최고의 윤리적-법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존엄한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자율적 존재자, 즉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존재자이다.”

이에 따르면 타인의 존엄성(법적 존엄성이 곧 인권입니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곧 자유/자유권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며 자유권은 각인에게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또 이렇게 이해된 자유로운 행위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기도 합니다. - 이렇듯 칸트에 의해 우리는 인간 자유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적 자유 개념을 (공리주의와 달리) 인간 존엄성, 자유권, 생득적 자연권 개념과 연결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복, 이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합리적-자연권적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분명 칸트의 기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한 칸트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의 자유 개념은 가령 루소에서도 발견되며 헤겔 역시 상당 부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직 칸트에서만 발견되는 ‘자유주의에의 기여’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칸트가 인간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도덕형이상학기초]의 ‘목적의 정식’입니다. 이 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식은 도덕법칙이므로, 이곳에 등장하는 존엄성(‘목적 자체’)을 우리는 도덕적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와 구분되는 바의 법적 존엄성의 개념 역시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의 [법이론]에 등장합니다: “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법적 성실성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주장하는 데서 성립한다.” 이곳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가 곧 법적 존엄성입니다.

도덕적 존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는 (타인의 존엄성만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 역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명령에 의거해서 가령 자살, 장기의 판매, 성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도덕적으로 비난되는 것입니다. 이점은 법적 존엄성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법적 주체(권리주체)로서의 나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법적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의무(내적 법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의 판매, 성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법적으로 처벌되고 노예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도덕적/법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도덕적/법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우리는 도덕적/법적 자격조건(Quality), 즉 자유 존재자의 위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의 행위들이 타인의 존엄성/권리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도덕적/법적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만 도덕적/법적 자유/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자유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타인의 자유/존엄성/인권은 나의 자유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외적 한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에 관해서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나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내가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때 나의 자유 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인권입니다. 이

와 같은 나의 존엄성/인권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한계라기보다는) 나의 자유가 진정으로 자유일 수 있는 내적-필수적 조건,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유의 가능 조건인 셈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자유주의의 이해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유를 경제적 자유로, 자유주의를 시장중심주의로 이해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자유 및 자유주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분명 자유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 칸트의 시각에서 보면 - 자유에 관한 지나치게 협소한 이해이며, 그 협소함 때문에 현실의 자유주의는 한계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 다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적/법적/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자유로 축소하거나 그것에 종속시키려 한다면, 만일 우리가 자신의 존엄성조차 경제의 한 요소로 경제 기제(mechanism)에 편입시킨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유주의를 국가에 대한 시장의 우선성과 동일시한다면, 21세기의 인류는 수백 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자유의 극대화화 and 시장의 절대화가 가져온 사회적-역사적 현실, 즉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과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비참함을 말입니다.

‘나의 자유 행위로 인해서 (타인의 존엄성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칸트의 요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경제 주체를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시장이 인간-친화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경제 행위의 목표가 좁은 의미의 물질적-경제적 좋음/이익이 아니라 인간적 이익, 인간다움에 어울리는 좋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대한 관념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이해”(독일 위키)는 미래 자유주의의 발전에 칸트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칸트는 자유주의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균형추이자 자유주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형수인 셈입니다. 극단으로 치달는 일 없이 장기간 지속하는 자유주의, 오직 그런 자유주의만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